

코로나 확진 한달새 10배 이상 폭증

6월 4주 일평균 101명 → 7월 3주 1380명으로 제주 오미크론 계통 변이 검출률 전국 최고 “재확산 속 ‘숨은 확진자’ 증가 우려” 목소리

휴가철 제주지역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으며, 전파력이 빠른 BA.5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루 동안 20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13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43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 수는 1만1220명으로, 이는 전주 대비 3496명이 증가한 수치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03명을 나타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제주 일평

균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감소세가 이어지던 지난달 말(6월 4주) 기준 100.7명을 나타냈다. 이어 6월 5주 134.4명으로 100명대를 유지하던 7월 1주에는 309.9명으로 증가했다. 7월 2주 712.6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7월 3주엔 1369.9명으로 지난달 말 대비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연령대 중 10대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 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10~19세(20.2%), 40~49세(15.4%), 20~29세(13.2%), 50~59세(12.2%), 30~39세(11.8%), 0~9세(11.1%), 60~69세(8.6%), 70~79세(4.3%), 80세 이상(3.2%) 등의 순이다.

도방역당국은 학원 등을 통해서

동시간대에 밀접해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많은 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의 도내 검출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3주 기준 제주 BA.5 검출률은 7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검출률은 49.1%를 나타내고 있다.

거리두기 적용이 아닌 자율방역 체제가 유지되면서 ‘숨은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택치료자 비용과 격리 기간 지원이 줄어든 점이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던 격리 기간 생활지원비(2인 이상 가구 1일 15만원)를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면·비대면 진료비 지원도 자부담으로 전환됐다.

올해 1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최근 재감염돼 3일째 격리 중인 김모(30)씨는 “자가진단키트에 두 줄이 났는데 그냥 출근하거나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릴 들었다”며 “예전과 달리 경제적인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공가 처리를 해줄 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확산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날 정부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가족돌봄 휴가자에게 1일 5만원, 최대 10일(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공무원들은 다음 달까지 휴가에서 복귀하면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고, 현장 점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시선 모는 유럽수국 27일 제주시 구좌읍 한 카페 정원에 유럽수국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국기자

소방 코로나19 대응 세분화한다 전담구급대 기준 3단계→4단계로 운영

2020년 1월~올 7월 현재 코로나19 구급이송 2만명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들쭉날쭉하면서 제주소방이 전담구급대 대응 단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27일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도내 코로나19 관련 구급이송은 총 2만685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구급이송(8만9813명) 대비 23%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를 보이던 지난달 구급이송은 539건에 불과했지만, 확산세가 커진 이번 달에는 벌써 654건의 구급이송이 이뤄졌다.

이에 제주소방은 코로나19 전담구급대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이송 인원을 기준으로 50명 이하, 70명 이하, 90명 이하로 구분해 전담구급대를 5대(1단계)→7대(2단계)→9대(3단계)로 지정·운영해오던, 앞으로는 30명 이하, 40명 이하, 60명 이하, 70명 이하 4단계로 구분해 전담구급대를 4대(1단계)→5대(2단계)→7대(3단계)→9대(4단계)로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전담구급대가 우선적으로 이송하며, 의심 환자의 경우는 전담구급대를 포함한 도내 전 구급대(32대)가 함께 움직인다.

박근오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119구급대 이송 대비체계 강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선불리 건축물 철거했다간 ‘형사처벌’

내달 4일부터 처벌 강화

제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단 철거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할 때 ▷슬레이트를 걷어내면서 건축물 일부를 같이 철거할 때 등이다.

특히 종전에는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다음달 4일부터는 해체허가를 위반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사전에 해체허가(신고) 후 공사를 진행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운영

도, 2억7000만원 투입 11곳 시범운영거쳐 8월부터 본격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7000만원을 투입, 둘레길 구간 중 우천 시 범람위험이 있는 하천과 길 잃음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11개소에 탐방객 접근시 안전사고 예방사항을 고지하는 시스템 설치를 마쳤다.

도는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해발 600~800m에 자리잡은 한라산둘레길은 국유림 일대를 둘러싼 과거 일제 병참로(하치마키 도로)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등 임산물 운반로를 활용해 2010년부터 조성 시작했으며, 전체구간 80km 중 60.8km 구간에 조성을 완료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둘레길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 설치로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산불예방 및 산림훼손 계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둘레길 등 숲길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강경문 강상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황국 양용만 원화자 이남근 이정엽 현기종